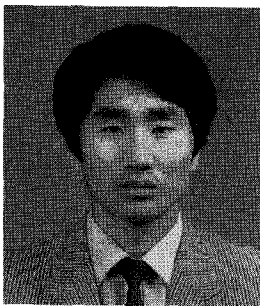


표피적 치유책보다 과감한 투자를...



黃仁善
(서울경제신문·사회부기자)

인간은 누구나 물맑고 공기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유쾌한 생활을 회구한다.

이런 생활환경은 그 사회구성원들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잘 유지될 수도 있고 또한 파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주위환경은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그리고 산업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대량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증병을 앓고 있다.

특히 전국민의 상수원인 주요호수들이 건설부·환경처등 관계당국의 관리소홀과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해업체들의 불법오염행위등으로 썩어가고 있다.

게다가 서울등 전국대도시의 대기오염 상태가 날로 악화돼 아황산가스의 경우 환경기준치(0.05ppm)를 뛰어넘은지 이미 오래며 인체에 치명적

인 카드뮴과 납등 중금속 오염물질마저 대기중에 떠돌며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들어와 각종 공해병 유발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 산업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부산물인 산업폐기물이 폭주, 위생처리되지 않은 채 농경지에 마구 버려져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질·대기·폐기물등 모든 분야에 걸쳐 환경오염이 심각한데도 우리사회구성원들은 근본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곁돌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대부분의 자연이치가 그러하듯 좋은 환경이 한번 파괴되면 새로 회복시키기가 무척 어렵고 이를 치유하는데도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우선 수질오염실태를 살펴보면 우리의 젖줄인 八堂·大清湖등 전국주요호수의 수질은 지난 86년 이후 최근까지 환경기준치(COD 1ppm이하)를 2배이상 초과하는등 극심한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물속에 질소와 인등 무기물과 유기물을 포함한 오염물질이 지나치게 많아져 식물성플랑크톤이 크게 자란후 그것이 썩으면서 산소부족현상을 초래하는 「富營養化」마저 가속시키고 있다. 상수원인 호수가 일단 부영양화되면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하고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수질의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호수오염의 주범은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배출하는 음식물찌꺼기등 생활하수와 공장에서 쏟아내는 공장폐수 그리고 소·돼지에서 나오는 축산배설물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기업·가정할 것 없이 아직도 소홀한 측면이 강하다. 정부의 경우 환경처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8월 전국 수돗물 파동 이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八堂·大清댐 유역을 특별대책관리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앞으로 이곳에서는 공해배출오염물질이 많은 공장·호텔·골프장신축등을 제한시키고 기존공해업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부와 지자체등 관계기관

환경오염의 공범인

국민·기업·정부는

단순한 수치상의 처방이 아닌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할때다.

의 거센 반대로 특별대책관리지구는 보류된 상태이며 단지 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 각종 배출허용기준만 상향조정하는데 그쳤다. 물론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은 현행 건축법제 44조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국방 또는 경제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食水개선을 위한 상수원수질 보호구역의 건축행위제한은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며 이 시점에서 때를 놓치면 나중에 엄청난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울러 일부기업들은 아직도 공해방지 시설을 비싼 돈을 들여 설치만 해놓고 비용절감을 내세워 비정상가동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기업주에게 있다. 하지만 공해방지사설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전국 환경기사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환경기사 한사람의 성실한 임무수행은 공해방지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전국의 환경기사들이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해온 결과 공장폐수의 불법방류규제등의 오염행위가 현격하게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서울등 대도시대기오염도 환경기준치를 크게 뛰어넘어 일반시민들은 평소 호흡곤란은 물론 호흡기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아황산가스오염도의 경우 지난 동절기에 서울시 문래동·길음동·쌍문동·신설동등은 일일 환경기준치(0.15 ppm이하)를 연간 수십일씩이나 초과했다. 이처럼 대기오염이 한계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환경처등 관계당국은 기본측정자료마저 뒤늦게 마지못해 공개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원인분석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막연히 겨울철 난방연료사용의 증가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명한 의사는 환자의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 때 치료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또 산업쓰레기처리 문제도 골치거리다.

날로 폭주하는 산업쓰레기를 묻을 매립지를 구하지 못해 전국에서 아우성이고 이미 확보한 땅마저 현지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도중에 중단된 사태가 적지않다.

최근 환경처가 조사한 각 시도별 산업폐기물매립지 보유실태에 따르면 올부터 99년까지 10년간 산업폐기물매립예상량은 총3천6백23만5천톤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2백44만평(서울·仁川·京畿지역제외)의 매립지가 필요한데 현재 확보율은 고작 8.45%인 20만6천3백63평에 불과하다. 게다가 부지확보과정에서 건설부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임을 주장하면서 쓰레기매립허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같이 수질·대기·산업폐기물등 모든 환경분야에서 적절한 근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개인·기업·정부는 단순한 포피적 치유책만 강구하고 있다.

결국 오늘날 환경오염은 양과 질면에서 고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시일에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환경오염의 공범인 개인·기업·정부는 단순한 수치상의 처방이 아닌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할 때다. ◀